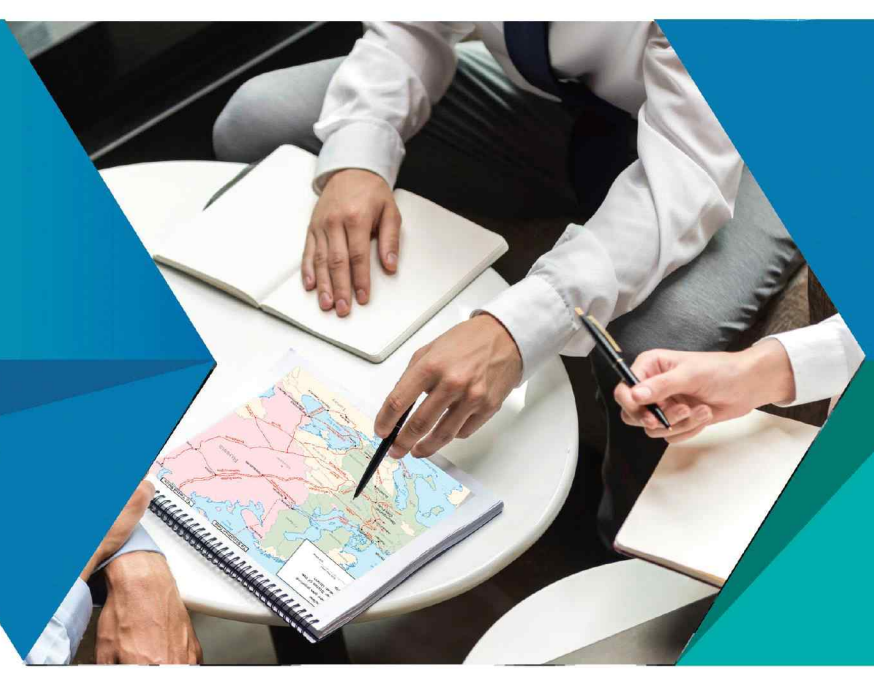


해외건설 인사이트 INSIGHT

2023 Vol.11

해외건설 발주 트렌드 변화 전망 및 대응 전략

- 
- I. 전 세계 인프라 투자 소요액 전망
 - II. 선진국 및 중·저소득국의 투자개발형 사업 현황 분석
 - III. 발주 트렌드 변화 전망 및 개도국 투자개발형 사업의 자금조달 현황
 - IV.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현황
 - V.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주요국의 투자개발형 사업 전망
 - VI. 대응 전략 등 결론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참여 연구원의 주관적인 견해로, 해외건설협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목 차

I. 전 세계 인프라 투자 소요액 전망	1
II. 선진국 및 중·저소득국의 투자개발형 사업 현황 분석	2
III. 발주 트렌드 변화 전망 및 개도국 투자개발형 사업의 자금조달 현황	7
IV.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현황	9
V.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주요국의 투자개발형 사업 전망	10
VI. 대응 전략 등 결론	13

I. 전 세계 인프라 투자 소요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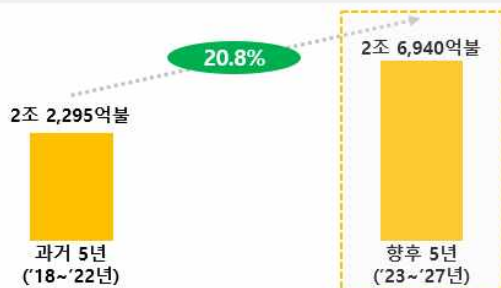
Global Infrastructure Hub*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투자 필요액 대비 공급 간 격차를 의미하는 인프라 투자 소요액(Investment Gap)은 향후 5년('23~'27년) 동안 총 2조 6,940억불로 추정된다.

*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G20가 '14년, 호주에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인프라 정보 생산-공유-안전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즉, 향후 투자 소요액이 과거 5년('18~'22년) 동안의 수치 2조 2,295억불 대비 20.8%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신규 도로 등 교통 인프라, 발전소, 상·하수도 시설 및 노후 인프라에 대한 개보수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전 세계 인프라 누적 투자 소요액 비교

향후 5년 동안 누적 투자액 규모는 과거 5년 대비 20.8%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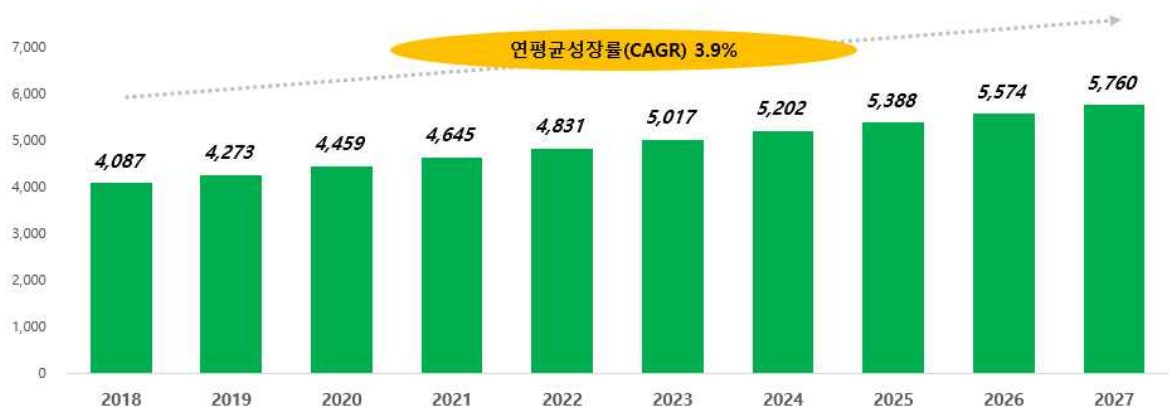
[출처 : Global Infrastructure Hub]

연도별 투자 소요액 현황 및 전망(단위: 억불)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8	4,087	'23	5,017
'19	4,273	'24	5,202
'20	4,459	'25	5,388
'21	4,645	'26	5,574
'22	4,831	'27	5,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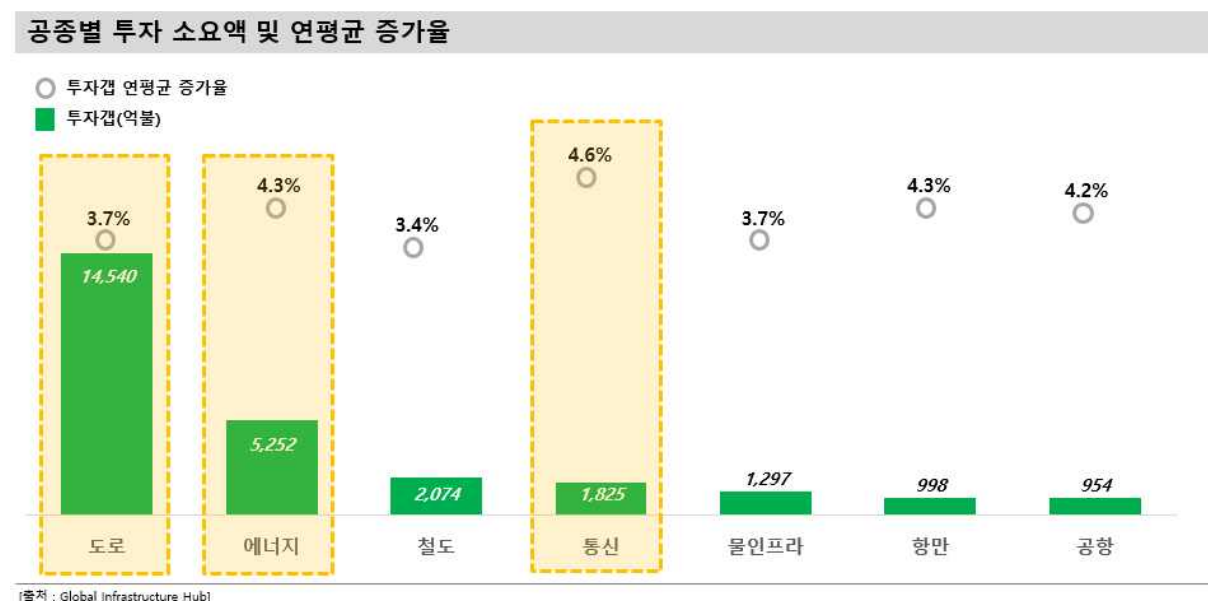
[출처 : Global Infrastructure Hub]

전 세계 인프라 투자 소요액 추이 및 전망(단위: 억불)



[출처 : Global Infrastructure Hub]

공종별 투자 소요액 규모를 살펴보면, 도로 분야 1조 4,540억불(비중 54.0%)로 추정되며, 에너지 5,252억불(비중 19.5%), 철도 2,074억불(비중 7.7%)로 3개 분야가 전체 투자 소요액의 81%를 차지한다. 이어 통신(1,825억불), 물인프라(1,297억불), 항만(998억불), 공항(954억불) 순이다.



II. 선진국 및 중·저소득국의 투자개발형 사업 현황 분석

전 세계적으로 매년 인프라 수요 충족을 위해 주로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정부 재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다자개발은행(MDB / '22년 기준 약 2,435억불*)이나 주요 OECD 국가들의 유무상 원조(ODA / '22년 준 약 2,040억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 Worldbank Group 1,044억불(commitment), EBRD 131억불(annual bank investment), EIB 783억불(financing agreement), ADB 205억불(total ADB operation), IADB 147억불(approvals), AfDB 82억불(approvals), CABI 43억불(approvals)

** '22년 기준 OECD DAC 30개 회원국의 총 ODA 지원규모는 2,040억불 수준임

그러나, 여전히 매년 투자 필요액과 투자 공급액 사이에 5,000억불 규모의 투자 소요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고 인프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각 국가는 소득 그룹별 특성에 맞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신규 사업 및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성능개선 등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민간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를 확대를 위해 AP*(Availability payment) 방식 적용 등을 통해 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 인프라 등 시설물이 계약서에서 정한 성과기준을 충족하면, 해당국 정부가 사업자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반면 중·저소득국의 경우, 급격한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따라 교통 및 발전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높은 부채 비율 등 정부 재정 상황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해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FDI 관련 법이나 PPP법 등 다양한 법·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개발형 사업 경험 부족 등으로 선진국 대비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여전히 MDB나 ODA를 활용한 사업 추진을 더 선호하고 있다. 또 베트남 등 일부 개도국에서는 정부 부채 급증 등으로 PPP 등 투자개발사업에 관심을 돌리는 국가들도 서서히 증가되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지금부터는 인프라 분야에 대한 글로벌 PF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주로 어떤 국가군에서 금융조달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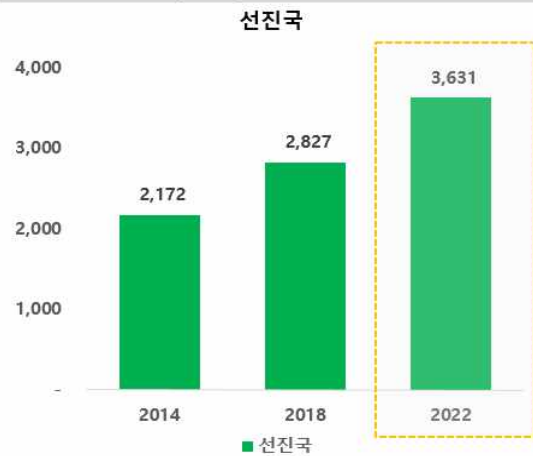
1. 글로벌 PF 대출(loan) 현황 분석

글로벌 금융정보기업 Refinitiv에 따르면, 발전·오일&가스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된 글로벌 PF 대출(loan) 규모는 최근 5년('18~'22년) 동안 연평균 6.5% 증가하여 '22년 3,631억불을 기록했다.

* 선진국 투자개발형 사업 규모는 Refinitiv PF 대출(loan)로, 중·저소득국가의 투자개발형 사업 규모는 Worldbank 민간투자액(PPI,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으로 가정

Worldbank에 따르면, 최근 5년('18~'22년) 동안 중·저소득(low and middle income)국가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액(PPI)은 팬데믹 시기인 '20년 52.7% 급감 후 점진적 회복 중이다.

글로벌 PF 대출(loan) 현황(단위: 억불)



[출처 : Refinitiv]

중·저소득국가에 대한 민간투자액(PPI) 현황(단위: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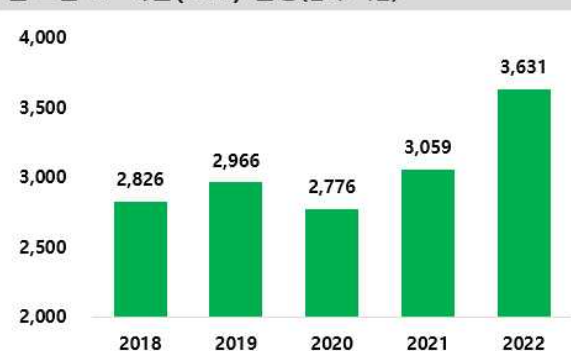
[출처 : Worldbank]

글로벌 PF 대출은 팬데믹 시기인 '20년에 6.4% 감소했으나, '21년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22년에는 '21년 대비 18.7% 증가하는 등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대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미주 지역 PF 대출은 연평균 10.6%, 영국·독일을 비롯한 유럽 및 사우디아라비아·UAE 중심의 중동 PF 대출은 연평균 8.0%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유일하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PF 대출은 연평균 2.3% 감소하는 등 부진하나, 이 지역 PF 대출 규모의 50%를 차지하는 호주 시장을 중심으로 '22년부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PF 대출(loan) 현황(단위: 억불)



[출처 : Refinitiv]

지역별 PF 대출 현황(단위: 억불)



[출처 : Refinitiv]

국가별 PF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내 프로젝트에 대한 PF 대출액이 1,040억불로 1위이며, 호주(413억불), 영국(250억불), 독일(176억불) 등 선진국 시장 사업에 대한 PF 대출이 활발하다.

국가별 PF 대출 현황(단위: 억불, %, '22년 기준)

순위	국가	PF 대출액	비중	성장률
1	 미국	1,040	28.6	67
2	 호주	413	11.3	35
3	 영국	250	6.9	7
4	 독일	196	5.4	221
5	 사우디아라비아	181	5.0	-46
6	 이태리	152	4.2	235
7	 브라질	123	3.4	12
8	 프랑스	123	3.4	52
9	 스페인	121	3.3	11
10	 캐나다	116	3.2	147

[출처 : Refinitiv]

PF 대출 주간사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계 금융기관이 Top 10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22년 PF 전체 대출액의 36.0%를 차지하고 있다. Mitsubishi UFJ(194억불, 1위), Sumitomo Mitsui(176억불, 2위), Mizuho(122억불, 7위) 등 일본 금융기관이 PF 대출의 13.5%를 주선하고 있다.

프랑스 금융기관인 Societe Generale(149억불, 3위), Credit Agricole CIB(143억불, 4위), BNP Paribas(121억불, 8위), Natixis(75억불, 10위)도 PF 대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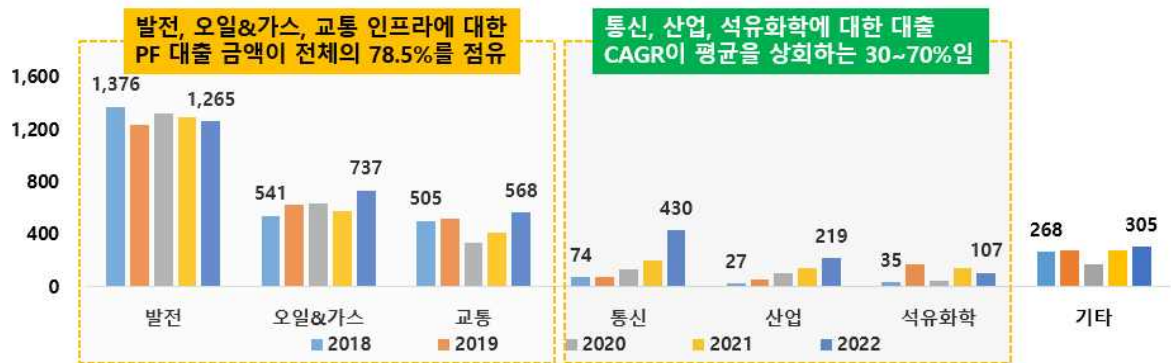
PF 대출 주간사(Mandate Arranger) 현황 현황(단위: 억불, 건, '22년 기준)

순위	금융기관	PF 대출액	건수
1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194	182
2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176	148
3	 Societe Generale	149	116
4	 Credit Agricole CIB	143	143
5	 Santander Corp	128	109
6	 ING	124	99
7	 Mizuho Financial Group	122	83
8	 BNP Paribas	121	83
9	 Bank of China	76	55
10	 Natixis	75	61
18	 KDB	51	29

[출처 : Refinitiv]

공종별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발전, 오일&가스, 교통 인프라에 대한 PF 대출금액이 전체의 78.5%를 차지하고 있다. 성장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데이터센터, 첨단사업 제조라인 신증설이 확대되면서, 통신, 산업, 석유화학 공종에 대한 대출 규모 연평균 성장률이 평균(6.5%)을 상회하는 30~70%을 나타냈다.

공종별 PF 대출 현황(단위: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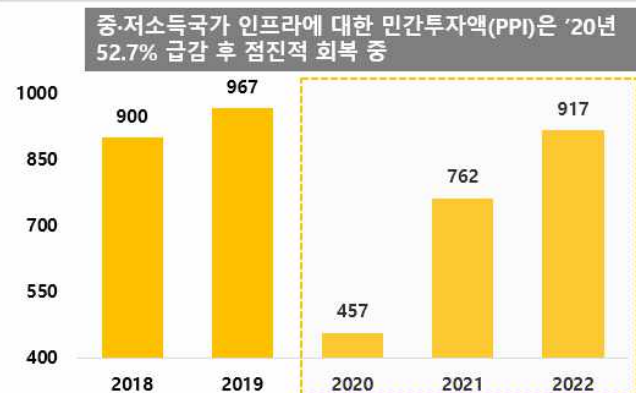


[출처 : Refinitiv]

2. 중·저소득국가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액(PPI) 현황 분석

Worldbank 기준 중·저소득(low and middle income) 국가 인프라에 대한 '21~'22년 연평균 민간투자액(PPI)은 840억불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코로나 이전인 '18~'19년 연평균 투자액 934억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미국, 호주, 유럽 주요국의 PF 대출 증가율과는 큰 차이가 난다.

중·저소득국가에 대한 민간투자액(PPI) 현황(단위: 억불)



[출처 : World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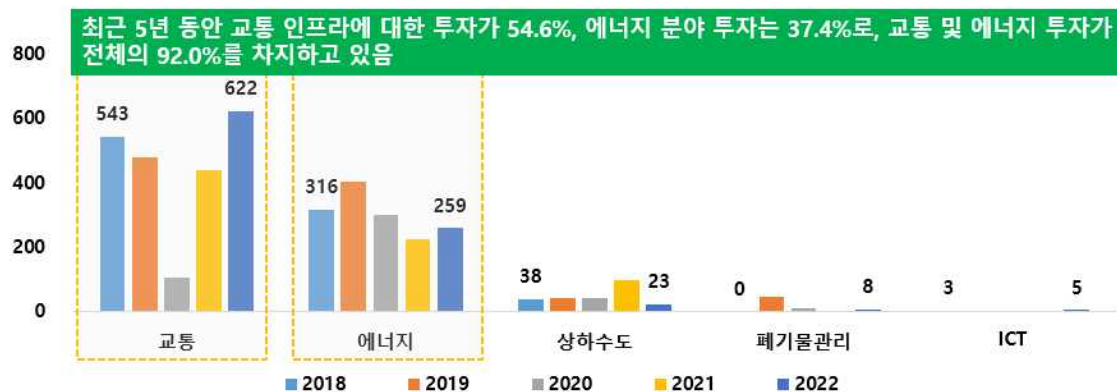
중저소득국 기준

구분	GNI per capita 기준(USD)
Low-income	1,135 이하
Lower middle-income	1,136 이상 4,465 이하
Upper middle-income	4,466 이상 13,845 이하

[출처 : Worldbank]

공종별 PPI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54.6%, 에너지 분야 투자는 37.4%로, 교통 및 에너지 투자가 전체의 92.0%를 차지하고 있다. 성장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ICT 분야, 교통 인프라가 각각 13.6%, 3.5%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 에너지 및 상하수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종별 PPI 대출 현황(단위: 억불)



[출처 : Worldbank]

Ⅲ. 발주 트렌드 변화 전망 및 개도국 투자개발형 사업의 자금조달 현황

1. 발주 트렌드 변화 분석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재정 여건이 개선된 산유국들도 단순 도급형 사업 발주를 줄이고, 금융조달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주방식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발주기관을 차주로 시공자가 금융을 직접 주선하는 시공사 금융주선형 사업방식이 일부 산유국을 중심으로 선호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투자개발형 사업방식을 더 선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민간 투자를 유치해 민간의 효율성 및 금융 경쟁력을 활용하고, 시공사들도 투자자(Construction Investor, CI)로 참여하게 하는 투자개발 사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발주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는 PPP방식 등을 통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기존 설계-시공 분리(Design-Bid-Build), 시공 일체형(Traditional Design & Build,

TDB),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방식 외에 혁신형 설계·시공 일체형(Progressive Design & Build, 이하 ‘PDB’*) 방식 등으로 발주방식으로 바꾸고 있어 주목된다.

* PDB 방식은 사업 초기부터 설계자, 발주자, 시공사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통해 독소조항 제거 등 이해관계자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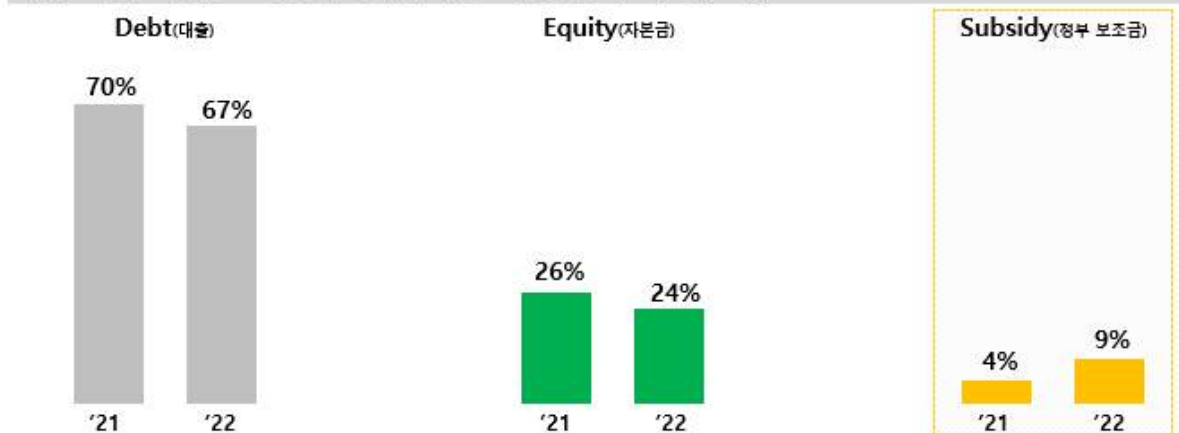
’20년경 캐나다에서 도입된 동 PDB 방식은 주요 선진국에서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채택하고 있다. 즉 기술력을 비롯해 경쟁력을 인정받은 사업자가 발주처와 공동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Open Book 방식의 협의를 통하여 상호간 리스크를 분담하는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PDB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조정하여 시공 리스크 감소 및 공사 기간 단축의 효과를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2. 개발도상국 투자개발형 사업의 자금조달 현황

Worldbank에 따르면, ’22년도 개발도상국 지역(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EMDE)의 투자개발형 사업 자금조달 구성은 Debt(대출) : Equity(자본금) : Subsidy(정부 보조금) = 67% : 24% : 9%로 나타났다.

’22년도 자금조달 구성을 ’21년과 비교해 보면, Debt, Equity 비중이 각각 3%p., 2%p. 감소한 반면, Subsidy는 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도국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의 한계 등으로 보조금 등 공공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EMDE)의 투자사업 자금조달 구성 비교(’21년, ’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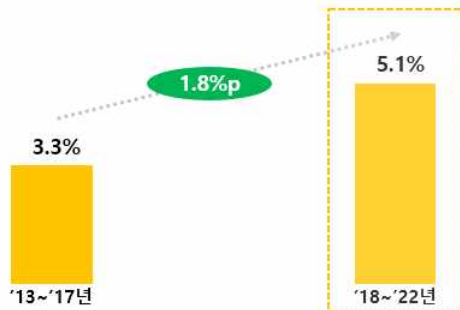
[출처 : Worldbank]

IV. 우리 기업의 투자 사업 수주 현황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18~'22년 투자 사업 비중은 5.1%로 '13~'17년(3.3%) 대비 1.8%p. 증가했다. 최근 투자 사업 수주 비중이 5% 수준대로 증가하는 등 향후 점진적인 투자 사업 참여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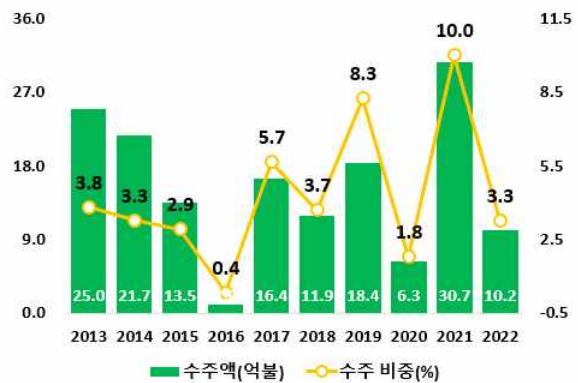
우리 해외건설의 투자 사업 수주 비중 비교

'18~'22년 투자 사업 비중이 '13~'17년 대비 1.8%p. 증가하며, 점진적인 투자 사업 참여 확대 가능성을 확인



[출처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 해외건설통합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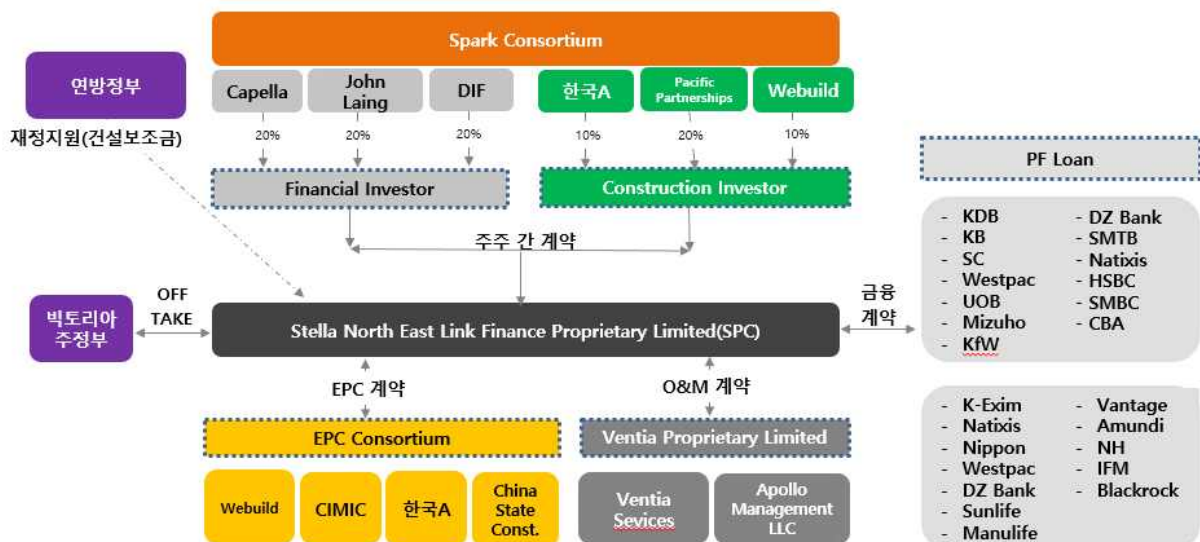
해외건설의 연도별 투자 사업 수주액 및 비중 추이



[출처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 해외건설통합관리시스템]

최근 우리 기업이 수주한 호주 노스 이스트 링크(North East Link) 및 노르웨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같은 선진국 토목 사업 참여가 눈에 띈다.

호주 North East Link 사업 구조도



[출처 : Refinitiv 등 관련 자료 종합]

V.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주요국의 투자 사업 전망

우리나라와의 건설 협력이 기대되는 주요국의 건설시장에도 투자 사업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및 인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대형 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외 투자 유치 활동 및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32년까지 재건사업의 세부 과제 완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총 7,500억불로 추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의 자금조달 계획안에 따르면, PPP 등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액은 2,500억불로 전체의 1/3 수준이다.

해외건설업계도 종전을 전제로 재건사업의 상당 부분이 투자개발형 사업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민관의 금융 경쟁력 결집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23년 G20 개최(9.9~10)국이자, 세계 3위의 건설시장인 인도에서도 변형된 투자 사업 모델을 도입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도로 등 교통 인프라에서는 EPC와 BOT(Build-Operate-Transfer)가 혼합된 HAM(Hybrid-Annuity Model)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HAM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사업비의 40%는 정부, 60%는 민간에서 투자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Invest India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도시, 도로, 철도, 상하수도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주요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100% 허용하는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

우리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사우디 'Vision 2030'의 핵심은 탈석유·경제다각화를 위해 5조 리얄(약 1,500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정책으로,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네오프로젝트(5,000억불) 자금조달 경쟁력이 사업 수주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NEOM 프로젝트 사업비(5,000억불)의 1/3이 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 'Discover NEOM' 전시회에서 NEOM CEO인 나드미 알 나스르(Nadhmi Al-Nasr)는 사업 참여를 위한 의미있는 파트너십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미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Jacobs*는 NEOM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투자를 위해 아람코(Aramco) 및 사우디 국부펀드와 JASARA라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했다. 이러한 금융 경쟁력 및 PM 역량을 갖춘 Jacobs는 The LINE 프로젝트의 PM社로 선정('23.2)된 바 있다.

* ENR 기준 2022년 해외엔지니어링 분야 매출 5위 기업임

주요 국가별 투자개발형 사업 관련 계획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필요 자금의 1/3은 투자개발형 사업 형태로 조달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재건사업 추진 방향은 3가지로 ① 회복력(Resilience) 강화, ② 복구(Recovery) 추진, ③ 현대화(Modernization and Growth) 지향임
- 총 15개의 세부 과제를 '32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총 7,500억달러로 추산함. 그 중 1/3은 투자 유치, 1/3은 grant, 1/3은 debt and equity로 조달한다는 계획임

인도 정부는 EPC 및 BOT가 혼합된 HAM 방식을 통해 투자개발형 사업 추진



인도

- Invest India에 따르면, 세계 3위의 건설시장인 인도는 도시 인프라, 도로, 철도, 상하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주요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100%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
- 특히 교통 인프라에서는 EPC와 BOT가 혼합된 HAM(Hybrid-Annuity Model) 모델을 통해 프로젝트 비용의 40%는 정부, 60%는 민간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통해 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음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nvest India, 외교부]

다음으로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사우디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현지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23년 1월부터 발효된 개정 '회사법'은 회사 설립 및 기업 인수 합병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제한 사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2년 4월 법안 발표 후 심사 중인 '신투자법'은 외국 기업을 사우디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개발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민영화법은 '21년 공포되어 이미 시행 중이다.

이러한 법·제도의 방향은 UAE,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으로 확산되고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동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수도 이전 사업 관련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 시장의 변화를 살펴본다. 인도네시아 현지 협력원에 따르면, 인니 국영 건설사들은 채권 발행을 통해 도로, 공항, 경전철(LRT) 사업 등 대형 사업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건설사의 부채 급증으로 인한 건설사 통폐합(9→4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상당 부분이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국가별 투자개발형 사업 관련 계획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5,000억불)의 1/3이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추진

- 사우디 Vision 2030의 핵심은 탈석유·경제다각화를 위해 5조 리얄(약 1,500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정책으로,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네옴 프로젝트(5,000억불)도 1/3이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해당 법제도가 정비됨
- 특히 민영화법은 '21년부터 시행 중이며, '22년 4월 법안 발표 후 심사 중인 신투자법은 외국기업을 사우디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법으로 판단됨



인도네시아

인니 건설사의 부채 급증 등 통폐합 필요성으로 투자 사업 증가

- 인니 국영 건설사들은 채권 발행을 통해 도로, 공항, 항만, 경전철(LRT) 사업 등을 수행했으나, 부채 급증으로 건설사 통폐합(9→4개)에 대한 필요성 제기
- 더불어 인니 정부의 신수도 이전 사업 예산안(정부재정 19%, PPP 55%, 민간투자/국영·지방공기업 26%)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니 사업 수주를 위해 자금조달 역량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 : 중동시장 전문 lawfirm, 인니 현지 협력원, 외교부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수도 이전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재정 19%, PPP 55%, 민간투자/국영·지방공기업 26%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인니 주요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자금조달 역량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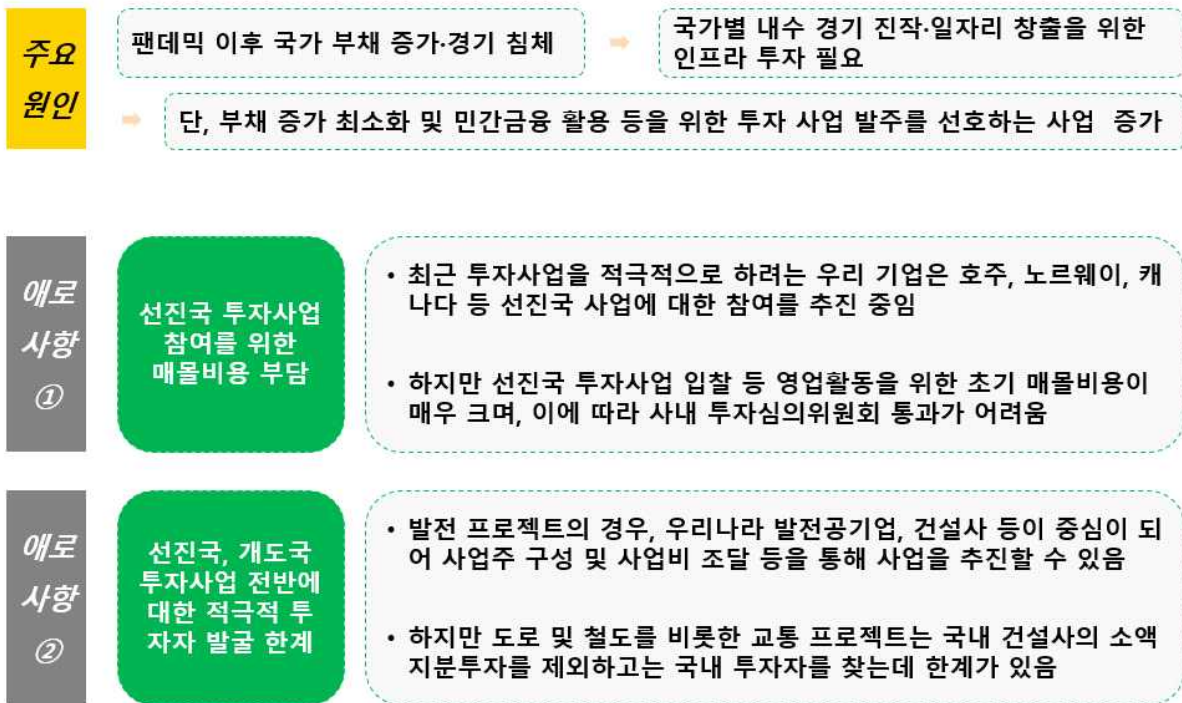
한편 중국은 지난 4월, 대규모 차관 제공으로 수주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을 준공했는데, 동 프로젝트에 레일(Rail) 및 차량을 비롯한 주요 기자재·장비가 중국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자카르타 지하철 등 주요 사업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도 자이카(JICA) 지원 등 ODA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VI. 대응 전략 등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개발형 방식의 사업 발주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업 기회는 풍부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애로사항도 여전히 존재한다.

첫 번째는 선진국에서의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를 위한 매몰비용 부담 문제이다. 최근 주요 대기업에서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의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추진 중이나 과도한 입찰비용 등 초기 매몰 비용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사내 투자심의위원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 사업 증가 원인 및 대응 전략



두 번째는 적극적 투자자 발굴의 어려움이다.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나라 발전공기업, 건설사 등이 중심이 되어 사업주 구성 및 사업비 조달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 및 철도를 비롯한 교통 프로젝트는 국내 건설사의 소액 지분투자를 제외하고는 국내 투자자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3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선진국 및 중저소득국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를 위한 Two track 전략이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중저소득국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EIPP, KSP를 통한 사업 발굴 - EDCF, EDPF를 활용한 인프라 지원 - ECA 금융 및 정책펀드(PIS, GIF) 등 복합금융 활성화가 요구된다.

두 번째는 지분출자 한도 관련 제도 보완 및 Secondary Market 활성화가 필요하다. KIND의 지분출자 한도*를 사업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KIND의 지분출자 한도 : 현재 국내 투자자 중 최대주주 지양

투자 사업 증가 원인 및 대응 전략

지원 전략 ①	선진국 및 중저소득국 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Two track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중저소득국) EIPP, KSP를 통한 사업 발굴 - EDCF, EDPF를 활용한 인프라 지원 - ECA 금융 및 정책펀드(PIS, GIF) 등 복합금융 활성화
지원 전략 ②	지분출자 한도 관련 제도 보완 Secondary Market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ND의 지분출자 한도*를 사업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검토 필요 * KIND의 지분출자 한도 : 현재 국내 투자자 중 최대주주 지양 •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사업에 대한 수익증권, 대출채권의 원활한 Exit을 지원하는 Secondary market 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
지원 전략 ③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투자사업 통계 지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성과가 평가에 반영되도록 경영평가 지표 설정 등 해외사업실적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최근 타산업과 융합된 형태의 수주가 나타나고 있음.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 범위 현실화 및 투자사업 통계지표 검토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개도국 사업에 대한 수익증권, 대출채권의 원활한 Exit을 지원하는 Secondary market 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투자개발형 사업 통계 지표에 대한 검토이다.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성과가 평가에 반영되도

록 경영평가 지표 설정 등 해외사업실적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 최근 타산업과 융합된 형태의 수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 범위 현실화 및 투자개발형 사업 통계지표 관련 개선에 대한 검토가 추진되어야 하겠다.